

특집 | 현대 일본의 보수 그리고 우익

일본 정치 보수화의 삼중 구조 | 박철희

투고일자: 2013. 12. 23 | 심사완료일자: 2014. 1. 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일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의 '총체적인 보수화'를 우려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경화,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의 논조가 아베 내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다. 역으로, 일본의 지식인들은 우경화라는 말에 거부감을 보인다. 일본 내에 양심적인 세력이 많다고 호소한다. 한국의 언론에서 논하듯 일본 정치 세력과 사회 전체가 우익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지식인들의 변명처럼 일본이 원천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현실적이지 않다. 적어도 2012년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래 강화되고 있는 보수화의 움직임과 증상들은 예전의 일본과 다르다.

이 논문은 일본이 삼중의 의미에서 보수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 간 역학의 측면에서 혁신 정당은 약화되고 보수 정당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보수와 혁신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희석되고, 보수와 보수 내지 보수와 우익의 대결로 집약되는 정치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둘째, 정당 내부의 역학 측면에서도 집권 여당과 주요 정당 내에서 혁신적이고 리버럴한 당내 집단은 약화되고 보수적인 정치 세력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집권 여당인 자민당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일본 정계 내에서 활동적인 의원 연맹 중에서도 리버럴한 모임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적이거나 우익적인 성향의 의원 연맹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가 분절화되고 내부적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다면, 후자의 경우 복수의 핵심 인물들에 의한 복수의 조직 구축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당적인 성격을 갖추어가고 있다.

주제어: 보수화, 보수리버럴, 보수우파, 중도보수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 이정환

투고일자: 2013.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3. 12. 5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지난 20여 년간의 장기불황은 일본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올 수 있었던 전후체제의 구조적 조건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 개입 속의 경제 발전과 사회보호 모두를 달성하는 것이 곤란해진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일본 전후체제의 고용구조와 재분배구조 속에서 선별주의적 포섭 메커니즘이 일본사회의 미시적 이슈로의 몰두와 좁은 단위 내로의 공공성 인식의 성격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후체제에 의한 제도적 유산으로서의 성격을 바탕으로 일본사회는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응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치 이슈의 미시화와 폐쇄적 성향

의 공공성 인식의 특성으로 인해 장기불황의 구조 변동에 대한 일본사회의 주류적 대응은 내향적 생활보수주의로의 소극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향적 생활보수주의의 감각이 일본사회 내 차별과 배제의 소수의 주장과 대결주의적 대외관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신보수주의의 정치적 기획에 대해서 특별한 찬반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장기불황, 구조개혁, 생활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넷우익과 반한류, 배외주의의 여론: 주요 언론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황성빈

투고일자: 2014. 1. 7 | 심사완료일자: 2014. 1.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의 목적은 일본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내셔널리즘, 배외주의의 확산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먼저 ‘넷우익’의 현상에 대한 선행 논의를 살펴본 후 일본의 주요 언론이 이 현상 또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했다. 주요 언론이 여전히 여론 공간 형성에 영향력을 갖고 있고, 인터넷상의 여론이 기존의 여론 공간과 독립적으로 출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 하에 그 입장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였다. 분석 결과, 리버럴, 보수 신문 모두 넷우익의 출현과 배외주의 확산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버럴(『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과 보수(『요미우리신문』) 사이에는 양적인 추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시각에서 차이는 없었다. ‘넷우익’의 동향에 대한 주요 언론의 시각은 『아사히신문』이 ‘변명적, 동정적, 위선적’(apologetic, condescending, hypocritical)이라면, 『요미우리신문』은 ‘은폐 감추기’(concealing), 『산케이신문』은 ‘암묵적 심정적 지지’(tacitly sympathetic support)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히려 현실적 보수(『요미우리신문』)와 심정적 보수(『산케이신문』)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 이러한 주요 언론의 무관심과 외면은 ‘넷우익’의 승인 욕구를 더 자극했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넷우익’은 기존 언론의 주변 국가, 특히 한국과 중국과의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선정주의적, 신보수주의적 심정에 충실한 보도가 낡은 논리적 껍질이기도 하다.

주제어: 넷우익, 반한류, 배외주의, 여론, 일본

아베 신조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와 ‘국가’: 미시마 유키오의 렌즈를 통해 본 전후 보수주의 미학 | 남상욱

투고일자: 2013. 12. 2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3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아베 신조의 『아름다운 나라로』 속의 ‘미’를, 미시마 유키오의 정치 미학(political esthetics)과의 대비를 통해서 검토함으로써, 최근 일본의 보수주의 속의 미적 감각의 문제성을 드러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아베 신조의 ‘탈전후 레짐’이라는 정치적 이념은 그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의 그것을 일방적으로 미화하거나 답습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에 대해 이 글에서는 아베가 돈이라는 가치적인 가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애국심을 ‘미’로 간주하는 행위를 통해 전후 일본 정치에서 금기시되어 왔던 정치에 미를 도입함으로써, 기시의 생활만을 증시하는 ‘기술적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점을 문제화한다. 아베의 행위가 전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지만, 전후 일본에서 정치 미학의 필요성을 외쳤던 미시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보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전물자들에게 미를 부여해 공동체 속에 그 존재를 가시화하는 것은 전전의 천황만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기능이었는데, 아베는 이러한 천황의 정치적 기능을 부활하기는커녕, 천황을 생의 안전을 기원하는 존재로

과악하고 있는 데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베에게 미는 그가 급진적인 동시에 보수적이라는 모순을 내재한 체로 전후의 법적 질서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각이 없이 '생의 안전'을 빌미로 개인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함으로써 법의 초월성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아베는 법의 정지를 위해 미에 기대했던 미시마보다 더욱 위험할 것이다.

주제어: 극우, 보수, 정치 미학, 아베 신조, 미시마 유키오, 법 폭력

현대 일본 우익 대중주의의 알고리즘: 고바야시 요시노리 『전쟁론』의 언설과 이미지 | 한정선

투고일자: 2013. 11. 19 | 심사완료일자: 2013. 11. 28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나타나는 우익 대중주의의 미학을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전쟁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만화라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면서 우익 사상을 재구성 및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고바야시는 『신오만주의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역사 문제를 '대동아전쟁'으로 호명하면서 기억하는 작업을 했다. 『전쟁론』으로 귀결된 이 작업은 일본 내에서 6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다. 그의 작업을 언설과 이미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할 때, 그의 언설 전략은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적, 그리고 국가귀속적이라는 세 가지 특질을 보이고 있으며, 언설의 가시화 전략은 기형화, 기호화, 그리고 평면화로 압축될 수 있다.

주제어: 만화, 반기성세력적, 상식주의, 국가귀속성, 기형화, 기호화, 평면화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 서민교

투고일자: 2013. 12. 8 | 심사완료일자: 2013. 12. 2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논문은 전후 일본의 재군비 과정, 즉 자위대의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1948년에서 1950년대에 걸쳐 일본의 재군비 구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실천 과정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1950년대에 본격화한 일본 재군비 과정에서 초기에는 배제되었던 구 육·해군의 군인 관료들의 기용은 불가결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GHQ 역사과의 '핫토리'그룹을 비롯한 구 육군 출신의 대미협력기관 및 요시다 수상의 군사고문들의 활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편 구 해군의 경우는 육군에 비해서 그 해체의 정도가 미약해 패전 후 공식적으로는 육·해군이 해체되었지만, 해군의 경우 소해(掃海)부대를 제외하고 해체되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948년에 설치된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구 해군의 인맥은 육군에 비해 일원적으로 관리되는 창구가 존재했고, 구 해군 군인 중에 요시다 수상과의 인연이 깊은 군인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Y위원회'의 존재에 주목했던 까닭이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1954년 3월에 MSA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소련 전략을 위해 서방 제국에게 원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원조국은 군사력을 강화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서 일본은 미국에게 본격적인 재군비를 약속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위대는 '이름 없는 군대', '군대가 아닌 군대'로서 일본의 방위를 담당하는 물리적 장치로서 기능해 가게 되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동맹국가인 미국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에 일본이 이를 방어해야 한

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법리적 해석의 문제로서 미국을 방어하는 데 법적 근거를 ‘개별적 자위권의 확대’로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면 미국과의 공조 무력 행사에 제약이 거의 줄어들게 되어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분쟁에 일본이 휩쓸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은 만약 일본이 개헌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의 국민 정부는 개헌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석개헌’이라는 수단이 어느 단계까지 통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주제어: 일본의 재군비, 우익, 자위대, 방위청, 집단적 자위권, Y위원회, GHQ

연구논단

한일회담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 케네디 정권기 청구권 교섭을 중심으로 | 조아라

투고일자: 2013. 11. 26 | 심사완료일자: 2013. 12. 9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한미일 외교문서를 통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에서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케네디 정권기 미국의 정책 변화는 냉전체제 하의 안보 논리에 의한 것이기도 했지만, 각국의 국내·국제 정세 속의 ‘경제 논리’에 따라 나타난 것이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이 부담할 비용의 최소화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여,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방식으로 한국 및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한일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회담의 중지를 가능한 한 막고, 공적인 강제나 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가운데 한일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처럼 미국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한일회담의 ‘관계자’로서 기능하면서 결과적으로 김종필-오하라 합의가 타결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 글은 케네디 정권이 한일 간 청구권 문제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사실상 ‘신중한 개입’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비대칭적으로 행사되었음을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 대미 교섭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구권 교섭의 주도권은 주로 일본이 쥐게 되었으며, ‘경제협력 방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미국이 동조하고 이를 한국에 설득시키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미국의 압력이 비대칭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권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 자체의 난점뿐만 아니라, 국내정치적 상황, 일본의 대미 교섭력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케네디 정권, 원조정책, 비대칭적 압력

재일한국/조선인 사회의 갈등과 과제: 올드커머와 뉴커머 관계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3. 12. 1 | 심사완료일자: 2013.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4. 2. 11

이 글은 최근 구성원이 현저하게 다양해진 재일 동포사회에서의 올드커머(자이니치, 구정주자)와

뉴커머(신정주자) 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종래 올드커머뿐이었던 일본의 동포사회의 구성원은 많은 올드커머의 귀화(34만 5000명으로 추산)로 인해 올드커머의 숫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 1980년대 후반 이후 늘어나기 시작한 뉴커머는 어느덧 16만 명을 헤아리고 있으며 이미 6만 명이 넘는 뉴커머들이 영주권을 획득해 정주하고 있다. 더구나 1984년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국적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 10만이 넘는 동포 자녀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어 구성원의 다양화를 전제로 한 동포사회의 변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올드커머와 뉴커머의 융합이 늦어지는 가운데 제일 동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유효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 글은 현재의 신구통합이란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단이 하루 빨리 동포사회 구성원의 다양화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자기혁신을 꾀하면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민단의 과제를 정리하고 민단의 변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주제어: 제일 동포사회, 재일한국/조선인 사회, 올드커머, 뉴커머, 민단, 한인회, 신구통합